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시아 지부는 한국에 설치해야

일시 : 2024. 4. 16(화) 13:30

장소 : 성통만사 회의실(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서대문구 창천동 33-20,21 건물 6층)



1. 외신보도(SCMP; South China Morning Post 2024. 4. 3.)에 의하면, 일본은 최근 자국 재판관 중 한 명(Tomoko Akane)이 Hague(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소장직에 오른 것을 계기로 ICC 아시아 지부를 도쿄에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2. ICC는 동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지부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이달 4월 말에 그 설치안의 개요를 발표한다고 한다. 4개 지부 설치로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국제 분쟁을 재판하는 헤이그 단일 법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인 124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비회원국의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다. ICC 총회는 올해 말에 이 계획을 승인하고 2026년부터는 지부를 운영한다고 한다.
3. 일본은 국제법의 수호자로서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려는 포부를 갖고 있고, 오래전부터 ICC 사건 해결을 돕기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등 ICC 운영과 인력에 기여함과 동시에, ICC의 2022 회계연도 예산에 30억 엔(미화 2천만 달러)을 배정하는 등 ICC에 대한 가장 큰 재정 공여국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자국 출신 재판관이 ICC 수장이 되자 자국에 ICC 지부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4. 한국은 이미 초대 및 2대 소장을 한국 출신 재판관(송상현)이 맡을 정도로 ICC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고, 2011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여 ICC에 협조하고 있다. 또 세계 최장 최악의 반인도범죄를 저지르는 북한과 대치하여, 장차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한 유엔 서울사무소가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같은 목적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를 처벌하려는 ICC 아시아 지부는 일본 식민지배의 피해국이자 21세기 마지막 분단국으로서 가장 극명한 인권상황이 대립되고 있는 한국에 설치함이 마땅하다.
5.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ICC 아시아 지부 한국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24. 4. 15.

사단법인 북한인권(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